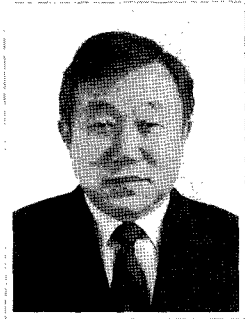


# 한국의 주요 일간지 사설에 나타난 원자력(I)

## 1990~2002

최 언 흥

서울시립대 도시과학대학원 교수/환경정책



### 서론

#### 1. 연구 목적

에너지 자원이 부족한 한국에서 원자력은 전체 전기 생산량의 40%를 차지하고 있다. 정부는 에너지 정책의 근간으로 원자력 발전을 계획하고 있지만 사회는 반핵·환경주의자들이 지배하고 있어 정부 계획이 실현될지에 회의적이다.

한국만의 상황은 아니다. 미국·유럽의 나라들, 일본에서도 반핵·

환경주의자들의 목소리가 크다. 그래서 원자력 산업이 원자력의 기술적·경제적 가치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대국민 이해 증진 전략을 마련하고 시행하고 있다.

원자력에 관한 일반 국민들의 이해는 그들이 매일 읽고 듣는 언론의 보도이다. 원자력이나 환경 문제를 다루는 언론 보도가 여론 형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선행 연구는 많이 나왔다. 한동섭의 조사 결과는 일반 국민들이 언론 매체 가운데 텔레비전 이용이 가장 많았고(41.4%), 인터넷(25.4%), 신문이 그 다음(24.8%), 잡지(5.5%), 라디오(3.3%)순으로 나왔다.(한동섭, 원자력과 대중 커뮤니케이션, 원자력산업, 2003. 5, p78)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성격상 예외적으로 원자력이나 환경 문제를 특집으로 다루지 않는 한 지극히 짧은 사건의 소개나 논평에 그치고, 곧 스크린으로부터 사라지기 때문에 전달하는

지식의 질을 분석하기는 어렵다.

인터넷 정보는 스크린 위에 지식과 정보의 홍수를 가져다 주지만 신문만큼 오래가지는 못한다. 일간지의 경우 '하루살이'이지만 언제든 과거를 찾아 나설 수 있다. 신문 사설은 신문의 지성을 담고 있다. 한국 일간지의 경우, 청년 시절을 기자로 보낸 40대 이상의 논설위원들이 원자력, 환경 분야의 사설을 집필한다. 그 분야의 전문자적 경륜을 갖고 그 신문의 지성을 대표한다.

신문사를 대표하는 최고의 지성이 사설로 나타나고 있다. 그들이 쓰는 사설은 한국의 지성인들에 의하여 읽혀지고 있다. 사설은 중요한 국가적·사회적·사건에 대한 서술이며, 논평이며 정책 개선을 제안하고 있다.

#### 2. 연구의 접근

문헌 내용을 분석하는 연구 방법으로서 신문 내용 분석이 그 효시가



된다. 언론학으로부터 국제 정치 분야에서까지 내용 분석은 시도되어 왔고, 발전되어 왔다. Berelson은 '의사 전달의 내용을 객관적·체계적·계량적으로 기술하는 연구 방법'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Kerlinger는 '변수 측정을 목적으로 의사 전달을 체계적·객관적·계량적 방법으로 연구·분석하는 방법'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Walitger와 Wiener는 '기록된 정보의 내용을 조사하기 위하여 고안된 체계적인 절차'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Krilpendorf는 '어떠한 자료로부터 그 문맥에 대한 묘사를 할 수 있고 타당한 준거를 만들어 내는 연구 방법'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사실이 담고 있는 내용을 분석하는 접근은 수없이 많다. 대개의 경우 사실의 제목이 그 내용을 대표한다. 그 사실에 쓰인 주요 단어(key word)를 찾아내어 그 사실이 전달하려는 내용을 알아낼 수 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다 읽고 나서 그 사실의 내용을 한 문장이나 두 문장으로 요약해 낼 수 있다.

**사실 내용 분석**

**조선일보**

• 1990년 •

조선일보는 1990년에 7개의 원

자력 관련 사실이 나왔다. 그 중 하나의 사실은 소련의 핵과 관련하여 정부가 수교되지 않은 소련에서 전략적 물자인 농축 우라늄을 수입하기로 결정한 사실에 대한 우려와 함께 원자력 발전과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에 역행하지 않도록 투명한 정보 공개와 신중한 정책 검토를 제안하고 있다(3월 7일).

북한핵과 관련해서는 2개의 사실이 나왔다. 북한의 폐쇄적 정치와 경제의 개방을 촉구하는 국제적 압력에 북한은 핵확산금지조약 철회를 언급하며 '벼랑끝 전술' 등 군사적 강경 노선을 선택해서는 안된다고 논평하며(5월 26일) 미국이 '확인도 부정도 하지 않는 핵정책'으로 남한 내 우선 핵무기 철수를 주장하는 북한에게 더 이상 힘을 실어줄 필요가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9월 16일).

1990년에 발생한 안면도 폭력 사태에 관한 사실은 3개로 1990년에 나온 사실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안면도의 핵폐기장 건설에 주민들이 저항을 하고 나서자 정부가 주민, 국민과 민주적인 절차나 이해 없이 폭력으로 자신들의 입장을 관철시키려 했다며(11월 10일) 정책 추진상의 문제를 지적하는 동시에 천연 에너지 자원이 없는 우리의 입장에서 원전 의존이 불가피하다며 주민의 이주 계획까지 언급하는 등 주민의 입장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다는 점이 주목된다(11월 7일). 또한 후보지 선정의 방법으로 경제적인 혜택을 받지 못한 안면도보다 그 동안 발전의 혜택을 많이 받은 지역을 후보지로 선정하는 방법과 적절한 보상을 통한 유인책을 사용하는 방법, 그리고 후보지 선정 과정에서 보다 과학적이고 공정한 접근 방식을 제안하고 있다(12월 1일). 11월 10일 사실에서 안면도에 설치하려 했던 핵폐기물장을 핵연구소 설립을 '유인책'으로 제안한 것이 파격적이다.

남은 1개 사실은 서울시가 처음으로 펴낸 [서울환경현황] 자료집을 통해 심각한 환경 오염 현상을 우려하면서 환경 영향 평가 항목에 공포의 대상인 핵폐기물에 관한 평가가 누락되었다는 점에서 환경 행정의 한계를 지적하고 있다(11월 22일).

• 1991년 •

1991년에는 32개의 원자력 관련 사실이 나왔다. 그 중 22개의 사실이 북한핵 관련 사실로 대다수를 차지한다. 1991년에 나온 조선일보의 북한핵 관련 사실은 전반적으로 정부의 주도적 역할 요구, 미국 핵정책의 무비판적 수용, 북한의 태도 변화 요구로 정리된다.

사실은 북한핵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남한 정부의 적절한 대응보다는 미국이 요구하는 국제원자력기구 사찰 수용,

대미 비방 중지, 테러의 포기 등을 북한이 전적으로 받아들일 것을 제안하며 강조한다(2월 8일). 사설은 북한의 핵개발을 막기 위해서 한-미 양국은 '한반도 비핵지대화 선언' 하고(6월 3일) 미국이 한반도 밖에서 핵우산 역할을 해줄 것을 제안하고 있다(4월 8일).

소련과 중국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저지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4월 17일) 북한의 개방을 권유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핵개발에 의한 북한의 외교적인 고립은 더욱 심화된다(10월 6일). 이러한 주변 정세에서 북한은 국제원자력기구의 핵안전 협정 체결 의사가 있음을 공식 통보하게 된다. 그러나 사설은 북한이 IAEA 규정을 충실히 이행할 것인지 지켜볼 일이라며 한반도 비핵 선언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한다(6월 10일).

북한이 국제원자력기구와의 핵안전협정 협상의 결과 표준 문안에 합의하고 확인, 서명함으로써 한반도 평화 정착에 한발 다가섰다고 평가하면서 핵사찰 뒤에 숨은 포석을 이해해야 한다고 설명한다(7월 17).

북한은 핵무기 개발 문제를 이용하여 미국과의 대등한 외교 관계속에서 미국과의 협상에 최대한 많은 것을 얻어내자는 속셈으로(6월 24일) 북한의 주장은 NPT 가맹국들이 평등한 의무와 권리를 가져야 하고 미국으로부터 안전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남한 내 미군 핵을 철거해야 한다는 것이다(9월 14일).

북한은 핵문제를 주한 미군의 핵무기와 연계하여 초점을 흐려왔으며(8월 3일) 핵사찰을 받아들일 듯한 분위기에서 영변의 핵폭탄 제조용 핵시설에서 핵폭탄 제조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지적한다(8월 30일). 사설은 한-미간의 외교 회담에 관해서는 북한 핵문제에 관해 미국의 핵우산속에서 주권 행사에 저촉되지 않는 외교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8월 8일) 제23차 연례 한·미 안보협의회의의 결과로 나온 '북한의 핵개발 위협과 불확실성이 사라지고 이 지역 내의 안전이 완전히 보장될 때까지 주한 미군 감축을 연기하겠다'는 합의는 현실적이고 현명한 선택이었다고 평가한다(11월 23일).

제 5차 남북 고위급 회담에서 북한이 핵에 대한 공식 언급 없이 남북한의 관계 개선에 나서고 있다면서 이러한 북한의 태도는 그 자체가 허구적이며 기만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12월 11일).

1991년 11월 8일 노태우 대통령은 북핵 문제의 평화적인 해결을 위해 '비핵 선언'을 한다. 사설은 '비핵 선언'이 동아시아 전역의 안보에 큰 의미를 갖는다고 소개하면서 전제 조건 없이 '비핵 선언'을 한 남한의 태도에 북한도 핵개발 의도를 버리고 민족 분열을 극복해야 한

다고 강조한다(11월 8일). 북한이 어려운 경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핵카드를 사용하는 것은 국제적인 신뢰를 떨어뜨리고 한반도의 긴장만 고조시킬 뿐이라며 북한의 핵포기를 촉구하고 있다(11월 12일).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북한에 대한 군사적 압박이나 국제원자력기구나 유엔총회, 안보리를 통한 외교적 노력 등이 수반되어야 하며 상황에 따라 강요보다는 '막후 협상'을 통한 해결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한다(11월 17일).

1991년 12월,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에 남북한은 공동 서명한다. 그러나 사설은 합의서 내용이나 합의 과정에서 남북 관계의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문제인 핵문제 논의가 없다고 지적한다(12월 13일).

남북 합의서에 남북한이 공동 서명한 이후 북한에 대해 명분없는 핵개발을 포기하고 국제원자력기구의 규정에 따라 핵사찰을 받을 것을 거듭 촉구한다(12월 9일, 12월 24일).

'남북합의서' 이후 남북 실무 대표 접촉에서 '남북 동시 핵사찰 기구' 설치에 합의한 사실에 민족적 쾌거라고 평가하고 있지만(12월 26일)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연내 타결을 지나치게 한국 정부가 서두른다면 민족 전체의 이익과 긴 역사의 안목으로 핵문제를 해결하기를 제안한다(12월 29일).



미국과 소련의 전략 핵무기와 관련된 4개의 사설은 양국의 핵무기 감축 계획이 한반도의 비핵화로 이어지기를 기대하고 있다. 조지 부시 미 대통령의 핵무기 감축 계획 발표가 한반도의 비핵화 선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 기대(9월 29일)와 소련의 대규모 감군 계획과 '핵감축 선언'이 동북아의 평화와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는 데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9월 24일, 10월 8일). 그러나 한편으로 소련의 연방 체제 붕괴로 인해 소련의 감시와 관리에서 벗어나는 막강한 핵무기에 대한 안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12월 10일).

핵폐기물과 관련한 사설은 3개가 있다. 생활·산업 쓰레기의 양산이 불가피한 상황에 처한 현대 사회에서 안면도의 핵폐기물 처리장 입지 계획에서 경험했듯이 혐오 시설에 대한 종합 대책 수립이 절실하다고 지적한다(3월 10일).

고성 지역에서 발생한 주민의 핵폐기물 건설 반대 시위를 두고 사설은 핵폐기물장 건설을 둘러싼 시위가 발생할 경우 공개적인 건설 부지 선정과 충분한 보상, 끊임 없는 주민 설득 같은 총론적인 지적에 그치고 있다(9월 26일). 또한 핵폐기물 처분장 건설 예정지 발표를 앞두고 각 후보 예정지로 지목된 지역들에서 거센 반발이 일자, 사설은 핵폐

기물 처분장 건설의 불가피성을 언급하면서 정부가 핵관련 시설의 잠재적 위험을 만회하고 포괄적이고 구체적인 지역 개발 정책을 제시해 줄 것을 제안하고 있다(12월 30일).

원전 사고에 관해서는 3개의 사설이 있다. 1991년 3월 16일에 발생한 두산전자의 폐놀 원액 방류 사건 같은 환경적 재앙의 가능성이 원자력발전소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며 미국의 드리마일 아일랜드(Three Mile Island) 원전 사고를 예시하며 '환경 보건 관련법'을 대폭 개정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3월 23일). 낙동강 폐놀 사건에 의해 환경 오염과 그 피해에 대한 국민의 의식이 한층 고조된 시기에 고리 원전이 이단 고장을 일으켜 원전의 안전성에 의문이 제기된다며(5월 28일) 원전에 대한 국민의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서 원전의 철저한 안전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11월 15일).

• 1992년 •

1992년에는 원자력 관련 사설이 총 24개이고 그 중에서 북핵 관련 사설은 16개, 일본핵 관련 사설은 4개, 탈냉전 시대의 핵무기 관련 사설은 3개, 원자력 에너지 정책 관련 사설은 1개가 있다.

「남북합의서」 채택과 「한반도 비핵화 선언」의 합의 등으로 인한 남북 관계의 화해 분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에서 미국은 한국이 북한 핵개발에 대한 확실한 보장 없이 남북 관계 개선을 너무 서두른다고 우려와 함께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1월 9일). 미국은 뉴욕에서 북한과 차관급 회담을 갖는다(1월 24일). 동북아에서 미국이 패권적인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서 남한과 북한이 자주적인 핵문제 해결을 바라지 않다고 비판하고 있다. 남한과 북한은 「남북합의서」 채택과 「한반도 비핵화 선언」의 합의를 바탕으로 정상 회담과 8.15 고향 방문 등을 추진하지만 북핵 문제의 완전한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번번히 갈등의 골만 깊어간다.

북핵과 관련한 정부의 남북 관계 개선 노력과 경제 협력을 바라보는 사설의 눈빛은 차갑다. 북한 핵문제와 관련한 미국 상원의 청문회와는 달리 우리나라의 행정부와 국회는 진지하게 대처하려는 모습이 없고(3월 6일) 국가 안보와 인도적 문제를 분리하지 못하고 시급하게 핵사찰과 대북한 경험 접촉을 전면 허용한 정부의 결정을 비판하고 있다(7월 16일, 7월 17일, 8월 30일).

우리 정부의 대북 정책이 공감하기 어려울 정도의 신축성을 보이는 것은 핵문제 해결 없이 강경한 북한에 끌려가는 것이라고 비판하며(9월 26일) 북핵과 관련하여 남북한 관계와 주변국들간의 관계의 변화를 예상하고 확고한 정책 대안이 있

어야 한다고 지적한다(5월 4일).

북한은 핵사찰을 미루면서 대외 정책 수단으로 핵카드를 사용하며(2월 23일) 「핵통제공동위」의 발족을 제안하고(2월 25일) 6년여간 끌어온 「핵안전 협정」에 정식으로 서명했지만 이것이 핵사찰 수용으로 바로 착수될지는 북한의 과거 행적에 비춰 상당히 의심스럽다며 전반적인 불신을 나타낸다(4월 11일).

북한이 2년 전에 핵기폭 장치를 개발했다는 구소련 KGB의 정보에 의하면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비밀리에 추진하였으며(3월 17일) 핵통제공동위원회가 구성된 이후에도 북한이 상호 사찰 시기와 규정에 대해서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며(3월 30일) 국제적인 신뢰성 회복을 위해 북한이 스스로 재처리 공장을 폐기하고, 보다 철저한 사찰 제도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6월 12일).

사설은 남북 문제의 핵심은 핵의 흑에 있다고 보고 핵의 흑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보고 싶어하고 의심하는 핵시설을 '강제 사찰'하는 방법이 실시되어야 하며(5월 29일) '8.15 고향 방문' 같은 인도적인 차원의 교류가 오히려 교착 상태에 빠진 핵문제의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6월 6일).

미국과 소련의 핵무기 감축으로 인한 세계 핵질서의 변화속에서 한

반도는 아직 냉전 질서하의 핵무기에 대한 고정 관념을 갖고 있다고 지적하고(6월 19일, 8월 18일) 미국과 소련의 대규모 핵무기 감축 계획으로 인해 러시아 공화국의 통제를 벗어난 전술 핵무기를 미국을 비롯한 전세계가 관심을 갖고 엄격히 관리-폐기해야 하며, 핵과학자들과 핵기술이 핵개발을 위한 불량 국가로 유출되지 않도록 전 세계가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1월 31일).

일본의 플루토늄 수입과 관련하여 일본이 핵정책이 동북아 안보와 평화에 큰 지장을 초래할 것이며 핵개발하려는 북한에게 명분을 제공하는 위험한 행동이라고 비난하고 있다(1월 16일). 일본은 플루토늄의 수입에 이어 세계 최대의 핵재처리 시설을 건설을 계획하고(7월 21일) 구소련의 핵전문가들을 유치하는 것은 일본의 단순한 에너지 공급 전략으로 이해할 수 없으며 핵무기를 통한 군비 증강에 무게를 두고 있다(11월 23일). 또한 플루토늄 운송시 핵사고가 발생할 수 있고 언제든지 상황 변화에 따라 플루토늄은 핵폭탄 재료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일본은 이러한 국제적 의혹을 씻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11월 12일).

원자력 에너지와 관련하여 2월 28일자 사설은 우리 정부의 핵정책 방향이 부재하다고 지적하면서 '핵 부재 선언'으로 농축 재처리 시설

까지 포기하여 에너지원으로서 핵마저 포기한 정부가 조속히 핵정책을 재정립하기를 촉구하고 있다.

• 1993년 •

1993년에는 19개의 원자력 관련 시설이 나왔는데 북한핵 시설은(13개)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에 집중되고 일본과 러시아의 동해안 핵폐기물 무단 투기가 3개의 사설로 나오고 일본의 플루토늄 수입과 러시아의 무기 수출과 원자력 에너지 정책에 관해서 각각 한 편씩의 사설로 논평하고 있다.

북한은 핵문제는 폐쇄하고 경협에서는 개방 정책을 펴는 이중적인 태도를 취하면서(2월 2일) 국제원자력기구의 대북 특별 사찰을 거부한다. 북한 핵문제가 유엔의 안보리로 넘어갈 경우 북한 핵문제가 심각한 제재 상황으로 전개할 것으로 전망하며(3월 15일) 남북 관계를 단순히 낙관론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국제적 안목으로 좀더 확실하고 강경한 대북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촉구하고 있다(3월 8일).

북한은 수위를 높여서 핵확산금지조약을 탈퇴한다. 사설은 국제원자력기구의 감사를 받지 않게 되는 북한의 핵무기는 고삐가 풀렸다고 지적하며(3월 13일) 이후 남북관계가 경색 국면으로 전개되는 상황에서 정부의 종합적인 위기 관리 능력을 요구한다(3월 22일).



북한은 남한이 팀스피리트 훈련을 영구 중단할 경우, 핵확산 금지 조약 탈퇴를 철회하겠다고 하며 미국의 한반도 핵무기 철수에 이어 한-미 공조의 초석의 역할을 해온 팀스피리트 훈련의 영구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북한의 요구 조건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남한 정부와 미국은 한-미 협조 체제의 중대한 훼손을 가져오는 일방적인 양보를 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3월 30일, 6월 20일).

사실은 북한 핵문제 해결에 중국의 역할을 크게 기대하며(4월 5일) 국제적인 공조 체제를 바탕으로 핵 문제가 안보리를 통해 해결되기를 희망하고 있다(5월 13일). 핵문제 해결이 제네바에서 열린 북한과 미국의 고위급 회담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희망하지만(7월 14일, 7월 21일)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하자 유관국들의 협상을 통한 해결을 제시하고 남한 정부의 적절한 대응을 기대한다(9월 6일, 12월 25일).

1992년에 일본의 플루토늄 수입을 우려하는 사실에 상관없이 플루토늄을 실은 배가 일본항에 도착한 사실을 두고 일본의 핵정책을 다시 한번 비판하며 일본의 플루토늄 수입은 한반도 주변 정세에 상당한 불안한 요소로 작용하게 된다고 지적한다(1월 6일).

경제난을 겪는 러시아가 아시아와 중동 지역에 무기 수출을 주력하

고 있다며 핵무기 감축 협상을 바탕으로 무기 수출을 자제할 것을 충고하고 있다(2월 8일).

러시아가 캄차카반도 근해와 동해에 대량의 핵폐기물을 버린 사실을 비난하고 핵오염 방지를 위한 세계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하며(10월 20일) 국민들의 무관심에 러시아의 핵오염을 방지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10월 21일). 일본 또한 동해에 방사성 물질보다 최고 1천배가 넘는 핵폐기물을 폐수로 방류했다며 강도 높게 비난하고 있다(10월 27일).

사실은 원자력 에너지의 수급의 차원에서 평화적 핵재처리까지 포기한 '비핵화 선언'은 재고해볼 필요가 있으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현명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10월 10일).

• 1994년 •

1994년에 31개의 원자력 관련 사실이 나왔다. 북핵과 관련해서 26개의 사실이 나왔다. 미-소 간의 핵감축과 관련해서 1개의 사실이 나와 있고 1개의 중국의 핵실험 관련 사실과 2개의 핵쓰레기장 관련 사실, 그리고 대학의 핵실험실 사고에 관한 1개의 사실이 나온다.

북한은 국제원자력기구의 입회조사 없이 임의로 영변 원자로 연료봉을 교체하고 한반도의 긴장을 한층 고조시킨다. 이 시기에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의 방북에 의해 북핵 문제

가 다시 협상 국면으로 돌아선다. 제네바에서 열린 북-미 회담의 결과 북한의 경수로 건설, 지원 문제가 대두된다.

북핵에 관한 사실은 북한핵의 투명성을 완전 보장 받기 위해 단기적으로는 철저한 핵사찰이 실시되고 장기적으로는 북한이 국제화의 길로 전환할 수 있도록 주변국의 긴밀한 공조 체제 속에서 북한핵이 다루어져야 한다고 일관되게 주장한다(1월 23일, 2월 14일, 2월 18일, 2월 20일, 2월 26일, 3월 18일).

북한의 김일성은 영변의 2개 시설은 군사 시설이라서 공개할 수 없다며 핵의혹을 증폭시키고(4월 19일) 핵문제를 최대한 세분화하여 협상 카드로 삼아 미국과 평화협정 체결을 요구하는 동시에(5월 8일) 영변 원자로 연료봉 교체를 국제원자력기구의 입회 조사 없이 임의로 꺼내 처리한다(5월 19일).

한승주 외무 장관은 북한의 영변 핵연료봉 교체 수준은 위험한 정도가 아니라 하고(5월 22일) 이홍구 부총리겸 통일원 장관은 정부가 비핵화 공동선언을 준수해 온 과거와는 달리 비핵화 공동 선언 재고를 언급한다(5월 25일). 사실은 정부의 일관성 없는 북핵 정책을 지적하며 유연한 대응보다는 강경한 제재와 응징을 전제로 북핵 문제를 단호하게 풀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6월 1일, 6월 4일, 6월 13일, 7월

28일).

카터 전 미국대통령의 방북에 따라 북핵 문제가 대북 제재 국면에서 다시 협상 국면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확보된다(6월 18일). 사설은 제네바에서 열린 북-미 고위급 회담의 결과를 두고 나온 북한의 핵개발 포기과 북한의 경수로 지원에 관해 우리 정부가 핵심에서 배제된 채 사후적 역할 분담이나 불합리한 재정 부담만 맡게 될 것을 우려하고 있으며 경수로 지원시 우리 기술진의 주도하에 이루어지는 한국형 원자로의 건설 추진(8월 14일)과 경수로 지원의 전제로 북의 핵투명성 보장과 핵개발 포기를 주장하고 있다(7월 8일, 8월 17일, 9월 16일, 10월 15일).

사설은 제네바 북-미 회담 결과를 두고 정부의 아마추어적인 외교 정책(8월 29일)과 자국 중심적인 미국의 대북 협상 태도 때문에(10월 11일) 북한과의 협상에서 많은 것을 양보했다며 경수로 건설 자본의 지원을 대북 협상 전략 카드로 활용할 것을 제안한다(10월 20일).

또한 북한에 경수로 건설까지 대체 에너지를 지급하기로 한 미국이 중유 공급 경비를 한국에 떠맡기려는 태도를 비판하면서(10월 23일) 핵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남북 경협을 성급하게 추진하는 정부를 비판하고 있다(11월 28일).

미국과 소련의 핵무기 감축과 관

련하여 하나의 사설이 나와 있다.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와 핵무기 처리에 관한 합의와 함께 10억달러의 재정 지원을 약속함으로써 세계 교류 협력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논평하고 있으며, 소련의 붕괴로 우크라이나·카자흐스탄·벨로루시 3개국에 분산 승계된 핵무기를 3개국이 폐기할 것을 동의함에 따라 핵무기 개발 의욕을 가진 나라들에 좋은 참고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1월 15일).

중국은 한반도의 전쟁 가능성이 가장 높았던 1994년 가을에 핵실험을 한다. 중국의 핵실험은 미국과 러시아의 핵군축을 주춤하게 하며 북한에게 핵개발의 명분을 주는 것이며 일본에게는 핵개발을 유혹하는 행위로서,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사설은 주장한다(10월 10일).

정부는 계속적인 핵쓰레기장 건설을 시도하지만 번번히 실패로 돌아간다. 사설은 정부가 울진에 핵쓰레기장 건설을 시도하려다 실패한 사건을 두고 원자력 발전의 불가피성을 피력하고 원자력의 안전성을 상당히 높이 평가하며(6월 2일) 평화적인 원자력 이용에 관한 국가적 차원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5월 15일).

전국 26개 대학 부속병원에 대한 방사선 장치 성능 검사 결과 91대의 표본 기기 중 67대가 기준치 이상의 방사선을 방출하는 것으로 판

명되어 낙후된 의료 시설의 개선을 주장하며 기준치 이상의 방사선이 방출되는 의료 기기에 관한 위험성은 언급하지 않고 있다(2월 17일).

• 1995년 •

1995년에는 19개의 원자력 관련 사설이 나왔는데 그 중에서 15개의 북핵 관련 사설은 대부분 경수로의 노형에 관한 내용들이다.

1개는 NPT 연장을 위한 회의를 다루고 있고 2개의 사설은 프랑스 핵실험을 다루고 있고 원전 사고 관련 사설도 1개 나온다. 북핵 관련 사설은 북한에 제공할 경수로 비용의 대부분을 담당하는 한국 정부가 우리의 기술력으로 주도적인 경수로 건설을 추진함과 동시에 경수로의 명칭은 '한국형' 이어야 한다고 주장한다(4월 9일, 4월 14일, 4월 23일, 6월 8일, 7월 30일).

4월 17일에 핵확산금지조약의 연장을 위한 NPT 회의가 열린다. NPT에 가입한 비핵 국가들이 성실하게 핵사찰을 받을 수 있도록 핵보유국의 성실한 핵군축 노력과 비가입한 핵보유국들에 대한 강력한 제재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북한을 겨냥하고 있다(4월 16일).

한국 정부가 북한에 제공할 경수로의 명칭에 대해 '한국형'을 명기하지 않을 수 있다는 입장을 표명한 사실을 두고 한반도 문제의 참여권을 잃게 되는 명분 없는 후퇴라고



비판하고 있다(5월12일). 미국은 자국의 이익만을 위해 한국의 주도적 역할(9월 17일)과 '한국형'을 지지하면서 미국의 원자로 판매를 위해 정당치 못한 로비를 벌이는가 하면(5월 24일) 북한에 지원하는 중유(1월 8일)와 10억 달러의 부대 비용(6월 11일)을 KEDO에 떠넘기려 하고 한국을 배제한 체 북-미 연락사무소를 개설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비판한다(5월 19일).

사실은 한국 정부와 미국의 유연한 협상 자세로 인해 한국형이라는 표현의 명기 없이 북한에 경수로를 제공하게 되었다고 지적하고(6월14일) 한국형 경수로 건설의 책임을 맡았던 원자력연구소의 직원이 해임된 사실을 두고 핵심 기술을 미국에 의존하려는 한전과의 마찰 때문이라며 독자적인 한국형 경수로의 건설이 힘들 것이라고 논평하고 있다(7월 21일, 7월 23일). 또한 경수로 건설 부지 조사 사업팀이 미국 중심으로 구성된 사실을 두고 한국형 경수로의 실종 내지는 변질이라고 비판하고 있다(7월 25일).

자크 시라크 프랑스 대통령은 미국을 견제하기 위해 핵실험을 재개한다고 선언한다(6월15일). 사실은 프랑스가 오만한 핵특권을 버리고 문화 국가로서의 국제적 발언권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한다(9월 3일).

원전 사고와 관련된 사실은 1개

가 나온다. 고리 원자력발전소의 방사성 누출 사고가 사고 발생 1년만에 발견되어 정부의 밀실 행정과 원전 안전 관리의 허점을 들어냈다며 이것이 남비 현상의 표적이 되지 않도록 정부의 즉각적인 개선책과 안전 관리 시스템 구축을 제안한다(7월 23일).

• 1996년 •

1996년에는 원자력 관련 사실이 8개가 나오는데 북한의 무장 공비 침투 사건에 따른 경수로 지원 문제를 다루는 사실이 6개이고 나머지 사실 2개는 영광 원전의 사고와 영광 원전 추가 건설에서 나타난 자치단체장과의 마찰을 소개하고 있다.

1994년 9월 북한은 잠수함을 이용하여 강릉에 무장 공비를 침투시키려는가 하면 노동1호 미사일의 실험 발사를 추진하면서 핵무기 탑재의 가능성을 보인다(10월 17일). 한국 정부는 북한의 무장 공비 침투사건과 장거리 미사일 개발에도 불구하고 대북 경수로 지원을 계속한다고 발표한다(10월 10일).

사실은 남한 정부가 남과 북한의 군사적 신뢰 구축 없이 대북 경수를 지원하는 것은 잘못이며 정부가 북한에 대한 강경한 핵통제 정책을 적극 추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10월10일, 10월 16일, 11월16일, 11월 24일, 12월 22일).

연례 행사처럼 원전의 사고는 매

해 발생한다. 문제는 원전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보여지는 정부의 무능력한 대응책과 전시 행정이다. 사실은 영광 원전 2호기가 증기 발생기 세관의 균열로 발전이 중단되어 방사능 누출의 가능성이 있었다면 원전이 불신을 받고 있기 때문에 더욱 투명성과 공개성을 철저히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한다(8월 8일).

원전 사고 이후 영광 원전 추가 건설의 국책 사업을 자치단체장인 영광군수가 정면으로 반대하고 나온 것은 자치단체장의 권한을 뛰어넘는 월권 행위라고 비판하며 원전 건설의 당위성을 강조하고 있다(9월 11일).

• 1997년 •

1997년에는 12개의 원자력 관련 사실이 나왔는데 4개의 핵실험 관련 사실은 경수로 비용에 관한 내용이고 5개의 사실은 대만이 핵폐기물을 북한에 '수출'하려는 것을 비난하는 내용이다. 핵폐기물에 관한 NIMBY 현상과 지진 발생지에 있는 원전의 안전 문제 그리고 일본의 원전 사고와 관련한 사실이 각각 하나씩 나온다.

북한이 대만의 6만배럴 핵폐기물을 대만에서 반입할 예정이라는 사실을 두고 통일 후 환경 복구 비용과 북한 동포의 방사능 오염 피해를 막기 위해 북한이 대만의 핵폐기물을 유입하면 경수로 지원을 중단하



는 등의 경수로와 연계하는 대북 정책을 정부가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대만의 이기적 남비 근성과 나라땅을 돈주고 파는 북한을 동시에 비난하고 있다(1월 17일, 1월 26일, 1월 28일, 1월 29일).

한국 정부가 북한에 대해 봉쇄 정책을 쓴 탓에 북한이 식량난 해결을 위해 대만 핵폐기물의 반입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수 의견에 대해서 사설은 식량난을 야기한 것은 북한 권력자의 실패라고 지적하고 있다(1월 31일).

1997년에는 대북 경수로 건설이 착공되면서 실질적인 건설 비용 문제에 관한 미국과의 갈등이 등장한다. 미국이 우리 정부에 KEDO 행정 비용 4백만 달러를 요구한 것은 우리 정부를 봉으로 삼고 생색만 내겠다는 미 행정부의 국제 전락이라며(8월 21일) 제네바 합의에 의한 경수로 사업 계획에 맞게 경수로 사업은 이루어져야 함을 지적하고 있다(7월 21일). 또한 사설은 경수로 비용이 52억 달러로 책정되면서 KEDO 구성원들이 경수로 비용의 배정에 대해 성의있게 협의할 것과 국민의 이해를 구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과 노력을 당부한다(8월 18일, 11월 26일).

1개의 사설은 핵폐기물 처분장의 부지 선정과 관련하여 연이은 영덕·안면도·굴업도 사태는 정부의 에너지 정책 부재와 국민의 남비 현

상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대만 핵폐기물 문제에 따른 반핵 정서와 정부의 무능이 원자력산업을 망치고 있다고 양비론을 펴고 있다(2월 9일).

나머지 사설은 일본의 도카이에서 발생한 핵사고 교훈을 통해 한국정부의 원자력 관리와 대처 방안 성찰이 필요하다는 사설과(3월 12일) 원전이 5기나 들어서 있는 남부 지방에서 발생한 지진의 진앙지를 당국이 정확히 보도하지 않아 주민의 불신을 더욱 조장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비판하는 내용이다(7월 4일).

• 1998년 •

1998년에는 15개의 원자력 관련 사설이 나왔는데 11개의 사설은 핵 관련 사설이고 2개의 사설은 인도와 파키스탄의 핵실험을 다루고 있고 원전의 에너지에 관한 사설과 대전 지역의 방사능 오염에 관한 사설이 각각 1개씩 나온다.

IMF 시대를 겪는 한국의 경제 상황에서 북한의 경수로 건설 비용은 한국 정부에 적지 않은 부담이며 새로 출범한 정부가 외교적인 실익을 추구하는 정책을 추진하기를 요구한다(5월 15일). 미국은 북한의 경수로 지원은 꺼리면서 중유 비용 부담은 한국에 떠넘기려 하고 있다(5월 1일). 북한은 중유 공급의 지연을 이유로 영변 폐연료봉 봉인 작업을 중단하고(5월 14일) 영변 주변

에 건설중인 대규모 지하 시설에 대한 의혹을 키우고(8월 27일, 11월 10일) 대포동 미사일을 시험 발사함으로써 동아시아를 또다시 혼란에 빠뜨린다(9월 1일). 이러한 북핵 의혹과 미사일 개발에 관한 남한 정부와 미국간에 미묘한 입장 차이를 보인다(11월 21일).

사설은 북한의 미사일 개발과 영변의 핵의혹 시설의 용도가 불명확한 상황에서 경수로 건설 비용 부담 문제를 논의한다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다고(9월 20일, 12월 4일) 경제 위기 극복과 '햇볕 정책'의 기초 아래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는 한국 정부의 대북 정책을 지적한다(10월 10일, 11월 15일).

인도가 24년만에 핵실험을 실시하여 핵무기 제조 능력을 보유하게 되면서 핵위험을 느낀 파키스탄도 인도에 이어 핵실험을 감행한다. 사설은 핵실험 국가에 대한 강경한 제재와 핵강국들 사이에 핵군축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5월 12일, 5월 29일).

1개의 사설은 대전 지역 지하수의 방사능 오염을 둘러싼 논쟁이 시민을 불안하게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6월 12일). 사건 중심의 사설에서 벗어나 1개의 사설은 에너지 과소비형 사회 구조를 에너지 절약형 사회로 전환하여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대체 에너지 개발에 주력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원전의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 평가하면서 현재의 현실적 대체 에너지로 원자력을 지목한다(1월 15일).

• 1999년 •

1999년은 12개의 원자력 관련 사실이 나오는데 6개의 사실이 북핵 관련 사실이고 3개의 사실은 원전 사고, 1개는 원자력 정책을 다루고 있다. 미국·일본과 관련된 핵문제가 각각 1개씩 나온다.

북한은 금창리 지하 시설 핵의혹 문제를 외교적인 협상 수단으로 계속 활용한다. 미국과 일본의 강경한 대응 자세와 달리 남한 정부는 전제 조건 없이 경수로 건설을 독립 추진하고(1월 8일) 중국은 방관적 태도로 북핵 문제를 바라본다(3월 16일). 미국으로부터 식량 60만톤을 지원 받기로 하면서 금창리 지하 시설 핵의혹 문제가 해결되지만 북한은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해 또다시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감행한다.

사실은 '북한의 공갈, 미국의 달래기, 한국의 비용 부담'이라는 양태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제네바 합의틀에 구속되지 말고 완전히 새로운 틀속에서 대북 정책을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2월 9일, 3월 17일, 7월 27일, 11월 4일). 미국 의회는 세계 비핵화의 핵심인 포괄적 핵실험 금지조약(CTBT)의 비준을 부결한다. 미국의 이러한 이중적인 태도는 핵개발 의욕을 가진 많은 국가들에

게 미칠 파장이 클 것이며 비 핵국가의 핵개발을 막을 명분도 잃게 되었다고 비판하고 있다(10월 15일).

1개의 사실은 핵무장의 가능성을 제기한 일본의 방위성 차관의 발언을 두고 세계적인 군비 축소 분위기에서 동아시아의 군비 증강이 더욱 강화될 우려가 있다고 논평한다(10월 20일).

1999년도는 밀레니엄 시대를 앞두고 유난히 원전 사고가 많이 발생한다. 핵물질 처리와 관리에 철저한 일본에서 대규모 방사능 누출 사고가 일어났으며(10월 1일) 한국에서는 월성 원전 3호기에서 중수 45l가 누수돼 작업원 22명이 방사능에 피폭된 사건이 일어났으며(10월 6일) 울진 원자력 2호기의 수소 누출에 대한 과학기술정보통신위 감사의 불확실한 추론 등이 민생을 더욱 불안하게 한다고 비판하고 있다(10월 4일). 1개의 사실은 이러한 원전 사고와 북핵 문제 등으로 인한 원전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원전 인력 양성에 많은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다며 원전 인력 관리와 안전관리 소홀은 잦은 원전 사고의 원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5월 10일).

• 2000년 •

2000년에는 북한의 모험적인 군사 행동이 발생하지 않았고 순조로운 경수로 건설로 인하여 원자력 관련 사실은 하나도 없다.

• 2001년 •

2001년에는 총 3개의 원자력 관련 사실이 나왔다. 부시 행정부의 등장과 기존의 대북 포용 정책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는 2개의 사실과 월성 원전의 위험성을 지적하는 1개의 사실이 있다.

사실은 새로 등장한 부시 행정부가 클린턴 행정부의 대북 포용 정책과 함께 제네바 기본 합의서 골격의 대폭 수정을 검토하는 것과 미국 국방부가 북한을 세계 3위의 안보 위협국가로 분류한 것은 북핵의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을 결과라고 지적하면서 주변 정세의 급격한 변화를 우려의 시각으로 바라본다(1월 7일, 12월 5일).

1개의 사실은 경북 월성 원전 주변의 단층대가 지진 발생 가능성이 높은 활성 단층인 것이 알려지면서 신월성 원전 건설의 백지화와 새로운 에너지 정책의 필요성을 언급한다(6월 4일).

• 2002년 •

2002년에는 27개의 원자력 관련 사실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25개의 북핵 관련 사실은 켈리 국무부 차관보 미국 특사의 평양 방문 이후 북한의 핵개발 시인으로 또다시 조성된 한반도의 핵긴장을 반영하고 있다. 미국과 일본의 핵무기에 대한 사실도 각각 1개씩 나온다.

2002년의 초반에는 북핵과 관련 된 사설보다는 주변국들의 핵정책 의 움직임에 주목하는 사설들이 나 온다. 미국은 '핵태세 검토' 보고서를 통해 불량 국가의 핵무기 개발 억제 목표로 사용 가능한 소형 핵무 기를 사용 가능성을 내비쳐 비핵화 정책의 근간을 흔들고(3월 11일) 일 본의 관방 장관은 "일본도 핵무기 를 보유할 수 있다"는 발언으로 동 북아의 평화 질서를 깨고 있다고 지 적한다(6월 1일). 북한이 핵무기 개 발을 시인하기 전에 한국의 대학 교 수들이 북한 원전 기술자에게 경수 로 운영 기술을 가르치기 위해 북한 의 강단에 섰다며 남북 관계와 남북 교류의 활성화에 기대를 한다(6월 8일). 도널드 럼스펠드 미국 국방 장관의 '북한 핵보유' 발언과(9월 18일) 미국 특사가 평양을 방문한 이후 북한이 비밀리에 핵개발을 해 왔다는 미 특사의 보고는 또다시 한 반도에서 핵긴장을 조성한다.

북한은 미국의 중유 공급 지연 때 문에 핵개발을 정당화하고 있고 북 한의 외무부 대변인을 통해 제네바 합의의 파기를 공식적으로 선언하 는가 하면(12월 12일) 국제원자력 기구의 핵감시 카메라와 봉인 장치 의 제거를 요구하고 미사일까지 중 동 지역에 수출하는 등 핵위기 상황 에서 '벼랑끝 전술'을 전개한다.

사설은 북한이 다시 한번 우리 정 부와 세계에 '핵 기만' 했다고 제네

바 합의의 파기를 북한이 책임져야 한다고 강도 높게 비난하고(10월 21일), '햇볕 정책'을 접고 대북 교 류가 일시 중단되더라도 결연한 공 조 체제 아래 핵문제를 우선 해결해 야 한다고 주장한다(10월 17일, 10 월 18일, 10월 20일, 10월 22일, 10 월 23일, 10월 25일, 10월 27일, 11월 19일, 12월 29일, 11월 10일).

사설은 북한의 핵개발에 대한 정 부의 미온적인 대응에 강한 불만과 불신을 나타내며 '북한의 핵개발과 미사일 수출'은 실패한 햇볕 정책 이 도와준 꼴이라고 김대중 정부를 비난한다(12월 11일). 또한 사설은 북한의 핵개발에 대한 정세현 통일 부 장관의 발언은 사실 관계를 왜곡 하고 한국의 남남 갈등을 일으킬 우 려가 있으며(10월 24일) 대북 협상 력을 떨어뜨리는 순진한 발상이라 고 지적한다(10월 31일). 신건 국정 원장이 3년 동안 북한의 핵개발 움 직임을 포착했으면서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않았다고 사설은 추측한 다(10월 28일). KEDO가 대북 중 유 공급을 중단하고(11월 15일) 미 국이 군사적인 발언까지 서슴지 않 는 대북 압박 상황에서(12월 19일) 대선 주자들의 구체적인 '북한 핵 해법'을 요구하고 있으며 북핵 문 제 해결이 2002 대선의 중요한 판 단 기준이라며 정치적인 의미를 담 고 있다(12월 13일).

그리고 사설은 북한이 1994년 이

후 70차례 이상 핵개발을 위한 고 폭 실험을 해옴으로써 이미 핵무기 를 보유했거나 완료 단계에 들어왔 을 것이라고 추측한다(12월 18일). 사설은 대선 이후 노 당선자의 '북-미 중재론'이 자칫 엄청난 중 재 비용이나 대가를 치를지도 모르 며(12월 25일) 노 당선자의 신중한 언사와 처신으로 굳건한 한-미 공 조의 틀고 다양한 국제 공조를 통해 서 핵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제안하 고 있다(12월 24일, 12월 30일).

### 중앙일보

#### · 1990년 ·

1990년에는 모두 7개의 원자력 관련 사설이 나왔는데 그 중 2개가 북한의 핵 의혹에 관한 사설이다. 이 사설은 IAEA 현장 검증 회피, 북한의 남한으로부터 미군 핵무기 철수 요구 등에 대한 대응 전략과 한반도 비핵화를 담고 있다(6월 18 일, 「북한 핵무기 개발설의 충격」; 11월 16일, 「한반도에선 핵 경쟁 안 된다」). 그리고 2개의 핵 폐기물 사 설이 게재되어 있는데 안면도 처분 장 선정의 과학적 근거 이유와 무책 임한 지역 이기주의, 양비론(兩非 論)을 담고 있다(11월 8일, 「핵 폐 기물 시비는 합리적으로」; 11월 9 일, 「권위주의의 행정 관행을 깨 라」).

2개의 환경 사설은 4월 22일 '지구의 날'을 맞아 체르노빌 사건과 같은 방사능의 위험과 지구 온난화 현상을 논의하고 있으며(4월 22일, 「하나밖에 없는 모두의 지구」 환경 원년을 맞아 자연 보전과 개발의 균형을 추구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여기서도 안면도 주민들의 폭동을 경계하고 있다(12월 29일, 「〈환경 원년〉의 난맥상」).

한 개의 사설은 한국이 소련으로부터 원전 핵연료인 농축 우라늄을 수입하기로 한 결정이 서방측과의 갈등 소지가 있지 않은지 우려하고 있다(3월 6일, 「한-소 교역, 새 가능성과 함께 우라늄 수입은 우방에 충격 없게」).

• 1991년 •

모두 26개의 원자력 관련 사설들이 나왔는데 21개가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 관련된 사설이고, 4개가 탈냉전 시대 미국과 러시아의 군축, 핵무기 감축 회담에 관련된 사설인데, 이 사설들도 북한의 핵으로 이어지고, 결국은 한반도의 비핵화로 끝난다(8월 1일, 「미-소 군축 세계로 파급되길」; 9월 30일, 「미 핵 정책, 남북한 관계 전기로」; 10월 7일, 「미-소 군축 세계로 확산을」; 10월 21일, 「군축 추세 맞춰가야 할 남북회담」).

1개가 고리 원자력발전소 1호기 고장을 다루고 있다. 원전의 안전

운영과 전력 수급의 차질을 함께 걱정하고 있다(5월 24일, 「원전 안전 전면 재 점검하라」).

북한의 영변 핵시설이란 말이 유행하기 시작했다. 소월의 진달래꽃이 나오는 영변이 핵무기 제조 공장으로 이미지를 바꾸게 된다. 북한의 핵 위협이 첩보 위성 사진에 조금씩 가시화되면서 고품발 실험 흔적이 나타난다. 북한은 핵무기 개발 의사가 없다고 말하면서도 IAEA의 핵사찰을 거부하며 주한 미군의 핵무기 철수를 요구하며 미국의 적대적 관계를 청산할 것을 또한 요구한다. 남한은 북한과의 당사자로서 한반도 비핵화를 요구하게 된다.

북한은 남한으로부터 미군 철수를 주장한다. 북한의 영변 핵시설을 외교·군사적 무기로 등장시키면서 한반도의 긴장, 동북아의 긴장, 세계의 긴장을 고조시킨다. 모든 북핵 사설은 한반도의 비핵화를 요청하며 북한이 IAEA의 핵사찰 수용을 반복적으로 요청한다. 남북 총리 회담에서 남북 동시 핵 사찰을 주장한다. 노태우 대통령의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군축을 위한 선언」이 일방적으로 발표된다. 중국·소련도 비핵화로 가야 한다고 제안한다.

남북한과 미-일-중-소의 2+4 회담 형식이 논의되지만 사설들은 남북한 대화가 최선의 방법이라고 반복적으로 주장한다. 불행한 사태를 경고하지만 북한은 무관심하게

보인다. 한-미 안보회의가 열리고 우리는 전쟁의 가능성에 대한 불안을 보인다.

사설들은 무력 저지는 안된다고 주장하며 외교적 노력을 주문한다. 남북 합의서의 정신을 계속 주장한다. 북한은 대응하지 않는다. 남한으로부터 미군이 핵무기 철수를 확인했어도 IAEA 사찰을 거부한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사설은 추측한다. 북은 남북 대표 판문점 회의에서도 남한의 핵 철수를 북은 다시 눈으로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북한은 핵 문제에 관한 한 미국이나 IAEA를 상대한다고 주장한다(4월 26일, 「북은 핵 사찰 받아들여라」; 4월 18일, 「한반도 안정화 주체는 남북한」; 6월 8일, 「눈 앞에 닥친 한반도 핵 논의」; 6월 27일, 「서둘러야 할 대북 핵 포기 설득」; 6월 28일, 「평양 또 간다니 말이 되나」; 7월 16일, 「실행이 중요한 핵 사찰 회의」; 8월 2일, 「남북한 '핵 대화'로 가는 길」; 9월 14일, 「북한의 자승자박」; 9월 26일, 「북한 핵 논의의 자가당착」; 9월 28일, 「위기감 속의 김일성 중국 방문」; 10월 26일, 「효용없는 북한의 핵 카드」; 11월 8일, 「성큼 내딛는 한반도 비핵화」; 11월 13일, 「남북한 문제, 당사자 결정이 기본」; 11월 16일, 「폭격설까지 불러 온 북한 핵」; 11월 20일, 「비핵화 추세와 한-미 안보회의」; 11

월 22일, 「동반 관계 확인된 한-미 안보」; 11월 27일, 「북한 핵 무력 저지는 안된다」; 12월 19일, 「북한, 핵사찰 수용만 남았다」; 12월 23일, 「기대 외면한 북한 핵 정책」; 12월 27일, 「밝아진 한반도 비핵화 전망」).

• 1992년 •

1992년에는 21개의 원자력 관련 사설이 나왔는데 그 가운데 18개의 사설이 북한 핵에 관한 것들이고, 1개가 일본의 핵무장 의혹에 관한 것(7월 21일, 「핵 패권 추구하는 일본」), 1개가 세계의 비핵화, 미국과 러시아의 핵무기 감축 선언에 관한 것(1월 31일, 「비핵 세계로 가는 길」), 다른 1개가 동위원소 안전 관리에 관한 것이다(6월 16일, 「구명 뚫린 방사능 물질 관리」).

북한 핵에 대처하기 위해 남한에서도 한국군과 미군의 Team Spirit 훈련을 중지하는 발표와 북-미 관계 개선, 북-미 고위급 회담, 남북 동시 핵 사찰이 떠오른다. 그러면서도 북한은 남북 합의서 실천 의지를 보여주지 않아 실망하면서 강경한 남한의 대응을 요청하면서 북한의 핵 사찰 수용만이 북한이 살아갈 길이라고 알려준다.

밖으로는 IAEA가 유엔 총회에 북한이 핵 사찰을 수용할 것을 결의하게 하지만 북한은 수시로 그들의 태도를 변한다. 그러면서도 북한은

남한과 경제 교류를 시도한다.

사설은 남북 경제 협력의 전제로 북한의 투명한 핵과 개방 노선을 제안한다. 한반도 비핵화 선언은 남한만의 '짝사랑'인 것을 고통스러워한다(1월 8일, 「한 걸음 다가선 남북 신뢰 구축」; 1월 20일, 「변화 조짐 보이는 미-북한 관계」; 1월 24일, 「미-북한 고위회담 이후의 과제」; 2월 18일, 「행사로만 끝나선 안될 평양회담」; 2월 21일, 「합의서 실천의지 없는 북한」; 2월 28일, 「북한 핵 단호하게 대처하라」; 3월 15일, 「북한 핵 합의 이번엔 지켜라」; 4월 9일, 「미-북 관계 개선의 전제 조건」; 4월 10일, 「북한은 핵 사찰 조속히 응하라」; 5월 4일, 「남북 고위급 회담에 거는 기대」; 5월 6일, 「핵 포기만이 국제 사회에서 사는 길」; 5월 17일, 「핵 재처리 는 비핵화 선언 위반」; 5월 28일, 「핵 문제 해결 없인 화해 없다」; 6월 11일, 「북한의 비핵화 공동 선언 위반」; 7월 16일, 「남북 관계 경색 푸는 계기 되길」; 7월 25일, 「남북 경협은 서로 믿는 가운데」; 8월 31일, 「대북 정책 이유 있는 변화인가」; 9월 18일, 「남북 합의보다 실천이 중요」).

• 1993년 •

1993년에 41개의 원자력 관련 사설이 나왔는데 북한 핵에 관한 사설이 33개, 일본의 핵 무장 사설이 1

개(1월 6일, 「핵무장 재고할 것인가」), 이라크 핵 1개(1월 18일, 「제2의 걸프전을 피해야」), 중국 지하 핵 실험 논평 1개(10월 6일, 「중국의 지하 핵 실험 강행」), 미-러 정상회담과 핵 무기를 포함한 군축 1개(4월 5일, 「미-러 정상회담이 남긴 것」), 안면도 주민들의 핵 폐기물 처분장 반대 폭동에 관한 사설 1개와 러시아의 핵 폐기물 동해 투기에 대한 논평, 공동 조사, 대응이 3개다(1월 19일, 「핵 폐기장 언제까지 미루나」; 3월 1일, 「러시아 핵 폐기물 동해 폐기」; 10월 18일, 러시아의 동해 핵 투기」; 10월 21일, 「법석만 떠는 핵투기 대책」).

1993년엔 북한의 핵 위협이 고조되고 있다. 북한은 탈냉전 시대 미국과 러시아가 핵무기를 포함한 군축 회담에서 새로운 시대의 흐름을 타라고 말한다. Team spirit 재개를 이유로 남북 대화를 중단하면서도 남한으로부터 경제 협력을 얻기에만 급급한 북한을 비난한다. 남북 합의서 1주년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비판한다. 북한이 비핵화 선언으로부터 탈퇴하기에 이르는데 사설은 국제적인 협력을 얻어 현명한 선택을 하라고 제안한다. 유엔 안보리에서도 북한의 핵 문제를 논의하며 대북 제재가 불가피함을 설명하기도 한다. 사설은 남북 당사자 회담을 중요하게 말하지만 북한은 미국을 주요 상대국으로 협상하고 있고,



남한 정부는 정경 분리나, 아니나가 분명치 않다고 비판한다.

남북 정상 회담이 예측되고 있지만 결국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는 것만이 최종의 답이라고 주장한다. 북-미 회담에서 북한은 '비핵화 협정 탈퇴를 유보'하는 모습을 보이고 사설은 약간 안도의 숨을 쉬지만 그것으로 불충분하며 완전 복귀할 것을 주장한다. 김영삼 대통령과 클린턴 대통령의 강경한 대북 발언 등이 한반도를 긴장케 한다.

북한의 식량난 도음이거나 경제 지원도 북한 핵의 투명성 보장 이후에 가능하며 선·후 전제 조건 충족을 논의하고 있다. 경수로 건설 지원도 북핵의 포기 조건 위에서 가능하다고 말한다. 남한의 핵 주권도 논의되고 있으며 최악의 경우 남한도 핵 재처리 시설과 우라늄 농축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북-미 협상의 윤곽이 북한의 Team Spirit 중지, 북한 원자로의 경수로 전환 지원, 북-미 외교 관계 수립으로 나타나며, '일괄 타결'이란 말이 유행어가 된다. 남한의 안보 태세를 논의하면서, 국제 사회의 대북 압력, 북-미 간 협상이 남한의 의사를 반영하지 못할 때의 대비책을 마련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1월 4일, 「전략 핵 감축과 한반도 핵」; 2월 2일, 「북의 두 목표 동시 추구」; 2월 12일, 「북, 핵 포기 않은 할로 없다」; 2월 19일, 「핵에

걸린 남북 합의서」; 2월 22일, 「북, 왜 이렇게 도전적인가?」; 3월 13일, 「북은 핵을 갖겠다는 건가」; 3월 15일, 「〈북핵〉 대비태세는 돼 있나」; 5월 8일, 「안보리까지 간 북한 핵」; 5월 21일, 「북, 정책이 분명치 않다」; 5월 26일, 「남북 대화 재개의 대응자세」; 6월 5일, 「북한 핵엔 분명한 메시지를」; 6월 12일, 「NPT 탈퇴 유보론 불충분」; 6월 26일, 「주목되는 대통령의 〈핵〉 발언」; 7월 7일, 「G7 정상회담, 기대와 현실」; 7월 10일, 「클린턴 방한에 담긴 뜻」; 7월 12일, 「클린턴의 강력한 대북 경고」; 7월 27일, 「후전 40주년 다짐」; 8월 2일, 「대북 지원은 핵 포기 뒤에」; 8월 22일, 「북한 식량난 도울 길 없나」; 9월 2일, 「일괄된 대북 전략부터」; 9월 28일, 「상투적인 북한 핵 줄다리기」; 10월 9일, 「평화적 핵 주권 회복해야」; 10월 24일, 「북-미간 막바지 핵 협상」; 10월 30일, 「핵문제 보다 적극 자세를」; 11월 2일, 「북한은 국제 여론을 두려워라」; 11월 4일, 「북핵 위협과 한미 안보 협력」; 11월 10일, 「정부 안보 태세는 확고한가」; 11월 12일, 「북핵 일괄 타결의 조건」; 11월 18일, 「불안한 미국의 북핵 대응」; 11월 20일, 「한-중 정상회담과 비핵 공조」; 11월 24일, 「한-미 정상회담의 북핵 정책 조율」; 12월 4일, 「북핵, 이제 시간이 없다」; 12월

24일, 「핵 투명성 꼭 보장돼야」.

• 1994년 •

1994년에 원자력 관련 사설은 78개로 그 가운데 북한 핵 문제를 다룬 사설이 70개, 우리 나라 핵 폐기물 처분장을 다룬 사설이 6개(5월 13일, 「핵 폐기장 데모의 악순환」; 5월 31일, 「핵 폐기장 반대는 할 건가」; 6월 4일, 「남비현상 배척한 판결」; 11월 17일, 「핵 폐기장 더 늦출 수 없다」; 12월 11일, 「탄광촌의 핵 폐기장 유치」; 12월 22일, 「핵 폐기장 선정 이후의 과제」), 일본의 핵 무장 우려(5월 12일, 「투명치 못한 일본 핵」), 소련 체제의 붕괴로 핵무기 확산의 우려를 담은 사설(8월 19일, 「경계해야 할 핵 물질 확산」)이 각각 1개씩 게재되었다.

1994년은 한반도의 전쟁 가능성이 전후 가장 높았던 해. 따라서 78개의 원자력 관련 가운데 70개가 북한의 핵에 관련된 것을 이해할 수 있다. 북한이 IAEA와의 불협 화음을 내면서 안보리의 제재 조치를 논의하게 되면 북한은 그것을 '선전포고'라 부르고, 중국은 안보리 제재 대신 대화를 말하고, 러시아가 그것을 지원하는 한 북한에 대한 실제의 제재는 아무 것도 없다.

미국은 그 한계를 알고, 제네바 회담에서 영변 핵시설을 봉인하고, 200만kW 발전의 경수로 2기를 건설해주고, 한-미 연합 군사 훈련인

Team Spirit를 중단하고, 북-미 외교, 경제 협력 관계 개선을 제공한다.

북한은 제네바 회담에서 Framework을 만들어내기까지 끊임없이 벼랑끝 외교를 펼치고, 판문점 남북 회담에서는 “서울을 불바다로 만든다”는 위협을 받게 된다. 미국이 영변 핵 시설을 공습하게 되면 한반도 전쟁이 가능하고, 우리는 안보 태세를 갖추었는가, 군사적 대비를 하고 있는가, 유화적이며 ‘당근’만 주고 있지 않았느냐, 중국·일본·러시아와의 외교를 통해 국제적 압력을 북한에 가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무력감에 빠진다.

한-미 군사, 외교적 공조를 강조하면서 미국의 북한 관계 개선을 ‘위협’하게 논평한다.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의 평양 방문, 김일성 주석과의 회담으로 제네바 회담을 열면서 북-미 간의 ‘일괄 타결’이 나온다 (1월 6일, 「주기만 한 북-미 핵 협상」; 1월 17일, 「북한, 과연 개방할까」; 1월 27일, 「페트리어트의 한국 배치」; 1월 29일, 「한반도 불안한가」; 2월 4일, 「북핵 대응책 있나 없나」; 2월 7일, 「안보태세 정말 문제 없나」; 2월 8일, 「북한 핵과 Team Spirit」; 2월 12일, 「북핵 한-미 공조 잘 되고 있나」; 2월 16일, 「북핵 사찰, 이제 시작일뿐」; 2월 21일, 「성급한 핵 사찰 이후 거

론」; 2월 27일, 「북한 핵 문제, 이제 시작이다」; 3월 10일, 「특사 교환에 급급 말라」; 3월 17일, 「북핵, 어쩌다 이렇게 됐나」; 3월 18일, 「북핵 정책, 국민은 불안하다」; 3월 21일, 「안보태세 믿을 만한가」; 3월 22일, 「정상 외교의 최우선 과제」; 3월 23일, 「북핵 대응 체제 바꾸라」; 3월 25일, 「새 시대의 한일 협력 관계」; 3월 28일, 「언제까지 의장 성명인가」; 3월 29일, 「한-중 관계, 기대와 현실」; 3월 30일, 북핵 정책 왜 또 바뀌나」; 4월 1일, 「안보리 성명 이후의 과제」; 4월 4일, 「밀리지만 하는 북핵 대책」; 4월 8일, 「정부의 안보 정책 조정 기능」; 4월 16일, 「〈선특사〉 철회 이후의 문제」; 4월 18일, 「김일성이 미국에 가려면」; 4월 21일, 「방위 태세 강화는 기본이다」; 5월 1일, 「통일부총리의 우선 과제」; 5월 3일, 「북한, 왜 정전체제 흔드나」; 5월 14일, 「북한의 핵연료봉 도박」; 5월 16일, 「〈북핵무방〉론을 경계한다」; 5월 19일, 「심상찮은 북한 내부 사정」; 5월 24일, 「〈비핵화 선언 재고〉의 파장」; 5월 30일, 「위험수의 북핵 불장난」; 6월 1일, 「한-러 정상이 풀어야 할 과제」; 6월 3일, 「북한, 이제 되돌아서야 한다」; 6월 7일, 「핵 그늘 속의 정상 외교」; 6월 8일, 「중국의 바람직한 역할」; 6월 11일, 「태세는 굳건히, 말은 신중히」; 6

월 13일, 「카터 방북을 활용하라」; 6월 14일, 「IAEA 탈퇴의 위험성」; 6월 15일, 「북핵과 경제 마음가짐」; 6월 17일, 「협상돼도 위기 대비 만전을」; 6월 19일, 「남북한 정상 회담의 전제」; 6월 20일, 「정상 회담 핵 해결에 초점을」; 6월 27일, 「실질 회담 되도록 준비를」; 7월 8일, 「북-미 회담과 한-미 조율」; 7월 28일, 「북 핵탄 5개 보유설의 충격」; 8월 4일, 「북-미 회담을 주시한다」; 8월 13일, 「비핵화의 앞으로의 과제」; 8월 15일, 「경수로 부담의 조건」; 8월 19일, 「경계해야 할 핵물질 확산」; 8월 21일, 대북 경험, 원칙 속의 융통성」; 8월 23일, 「특별 사찰, 또 혼선인가」; 8월 24일, 「경수로, 돈만 낼 수는 없다」; 9월 5일, 「북-미-일 접근 놀랄 일 아니다」; 9월 8일, 「시급한 안보 외교 현실화」; 9월 11일, 「북미 회담서 경계할 일」; 9월 12일, 「경수로 부담, 한국은 봉인가」; 9월 27일, 「북핵, 더 이상 밀리지 말라」; 10월 10일, 「대북 핵 협상, 원칙 확고해야」; 10월 14일, 「과거 핵 투명성 높출 수 없다」; 10월 17일, 「북-미합의와 우리의 대응」; 10월 18일, 「수용 후 대책이 더 중요하다」; 10월 19일, 「남북 경험, 질서있는 추진을」; 10월 24일, 「중유 부담까진 곤란하다」; 11월 4일, 「주한미군 감축 논할 때 아니다」; 11월 17일, 「돈 내는 것만



중심인가; 11월 28일, 도전받는 북-미 합의; 12월 10일, 「북-미 관계 진전에 대비하라」)

그 때부터 북한에 설치된 경수로가 한국형이나, 러시아형이나에 불쾌함을 나타내며 경수로 건설의 40억 달러 비용을 우리가 담당하면서도 우리는 '빠져 있는' 비애를 느끼지 않을 수 없고, 중유 공급을 담당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미국은 북한의 핵으로부터 자유로워진 대가를 한국과 일본이 담당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미국의 상원 공화당 의원들은 Geneva Framework이 잘못 되었다고 비판하지만 중앙일보 사설은 그것을 지금 원점으로 돌려 놓을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1월 6일, 「주기만 한 북-미 핵 협상」).

우리 나라 핵 폐기물 처분장 선정에 관한 6개의 사설은 양산·울진 주민들의 저항 운동을 비판하며 서울 고법의 NIMBY 판결, 강원도 정선 탄광촌의 핵 폐기물 처분장 유치 운동을 희망적으로 논평하고 있으며 굴업도 확정을 또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언제까지 기다리고, 미룰 수 없으며, NIMBY의 반(反)국가적 지역 이기주의를 경계하면서도 정부의 폐기물 처분장 입지 선정 과정의 미숙성을 비판하고 있다.

일본의 플루토늄 비축이 핵무장을 뜻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리고

구소련의 핵무기들이 핵 마피아를 통해 불량 국가, 테러리스트 손으로 들어갈 수 있음을 또한 지적하고 있다.

• 1995년 •

1995년에는 26개의 원자력 관련 사설이 나왔는데 북한 핵 구름이 걷혀진 후에 경수로가 사설의 가장 빈번하게 논의되고 있다. 14개의 사설이 한국이 건설비의 대부분을 지불하기 때문에 한국의 경수로 건설의 중심적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는 명분, 그래서 한국형 경수로가 신포에 건설돼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다. 당연한 주장이겠지만 미국의 기업은 미국형 경수로, 러시아는 러시아형 경수로 건설을 시도하며 북한은 한국 경수로를 받지 않겠다고 한다면 그 주장의 관철은 쉽지 않았을 것이다.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한국의 경수로 건설 사업의 중심적 역할이 정립되고 한국형으로 타결되는 과정에 14개의 사설들은 우여곡절을 반영하고 있다. KEDO의 주계약자인 한전과 원자로 설계를 맡은 원자로 설계를 맡은 원자력연구소의 갈등도 사설에 나타나 있다.

한국은 경수로 지원을 통해 남북 경험과 남북 대화의 물꼬를 터야 한다고 제안한다(1월 27일, 「미 의회의 남북 대화 촉구」; 2월 17일, 「경수로, 미 기업 중개로의 한 점」; 3

월 10일, 「한국형 확고하게 밀고 가라」; 3월 25일, 「경수로, 밀려선 안 된다」; 3월 27일, 「생떼는 이제 그만」; 3월 31일, 「미국, 과연 믿을 만한가?」; 4월 8일, 「한국형은 원칙 문제다」; 6월 9일, 「경수로, 또 모호하면 안된다」; 6월 12일, 「명명백백한 합의문이 돼야 한다」; 6월 14일, 「경수로, 남북 협력 초석 돼야」; 7월 21일, 「경수로, 내부 조정도 못하나」; 8월 27일, 「북한, 경수로가 남의 일인가」; 12월 14일, 「경수로, 챙길 일 많다」).

북한 핵에 관해서 한-미 공조 체제를 강화할 것을 또한 주문하고 있다(11월 4일, 「한-미 안보협력의 방향」). 1995년 원자력 관련 사설 가운데 세계 비핵산화(NPT)가 탈냉전 시대가 추구해야 할 평화안이라고 주장하며 미국 클린턴 대통령의 핵 실험 영구 중지 제안을 환영하며 불란서의 핵 실험을 4개의 사설에서 비판하고, 중국의 핵 실험, 군비 강화, 대규모 군사 훈련을 2개의 사설에서 비판한다(4월 17일, 「NPT 꼭 연장돼야 한다」; 8월 13일, 「타국도 미국과 같이 핵 실험 중단 동참을」; 5월 9일, 「프랑스의 새로운 선택」; 6월 17일, 「프랑스의 핵 오만」; 9월 3일, 「프랑스, 세계 여론 안들리나」; 9월 7일, 「불의 반시대적 핵 실험 강행」; 5월 17일, 「말 따로, 행동 따로 중국 핵 논리」; 9월 5일, 「한반도 맞은 편의



중국 군사 훈련).

지자체가 시작하는 1995년 인천 시장 후보들이 인근 굴업도가 핵 폐기물 처분장 후보지가 되는 것을 지지하겠다고 나선 데 대해 사설은 우려를 나타내며 NIMBY를 업고 나오는 지자체장이 이 나라 미래를 어둡게 한다고 논평한다. 그리고 굴업도에 활성 단층이 발견되어 그 후보지를 포기한다는 정부의 발표에 놀라움을 나타낸다(5월 31일, 「벌써 나타나는 넘비 현상」; 10월 8일, 「굴업도 부적격의 충격」).

고리 원전의 방사능 누출 사고에 대한 논평의 사설은 안전 사고가 핵 폐기물 처분장을 찾는 일을 어렵게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7월 22일, 「방사능 관리 철저히 하라」). 그리고 김영삼 대통령이 미국 여행 중 한국계 과학자들 앞에서 핵융합을 연구·개발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2010년까지 추진할 것을 약속하는 것에 대해 논평하고, 그것이 2050년까지라도 투자해야 할 것이며 정권의 부침 없이 한국의 에너지 정책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7월 25일, 「미지에의 도전, 핵융합」).

• 1996년 •

1996년에 7개의 원자력 관련 사설이 나왔는데 북한의 핵이 다시 떠오르고(3개), KEDO 운영에 관한 논란이 일고(2개), 영광 5·6호기 건설을 철회한 영광군의 정책에 대

한 비판이 나온다(2개).

북한은 1996년 스파이들을 운반하는 핵 잠수함이 강릉 바다에 포류하는 사건이 터지면서 남북한의 냉기류가 오고, 북한은 오히려 경수로 건설이 언제 지어질지 몰라 원전을 가동해야 하겠다고 주장한다. 북한의 핵 개발을 비난하는 유엔 총회의 결의안을 북한은 비난하면서 한국이 먼저 미국의 핵무기를 반입했으며 미국의 식민지라고 비난한다. 한국은 의연하게 대처하라고 요청한다(11월 1일, 「유엔 총회에서 <개짓는 소리>」; 11월 7일, 「다시 도진 북한의 핵 공갈」; 11월 21일, 「벼랑 끝 전술 의연한 대처를」).

KEDO 운영에 미국의 중유 공급이 원만하지 않아 유럽 연합이 연 2000만 달러를 지불하며 이사국으로 들어오는 것에 대한 논평과 한국의 몫과 역할을 미·일·유럽 연합의 서로 다른 '이권'을 논의한다. 그리고 한전과 원자력연구원 사이의 경수로 건설의 갈등을 논평하고 있다(1월 12일, 「KEDO, 생색만 내는 미국」; 8월 3일, 「경수로 <한국형> 차질 안된다」).

영광 원전 5·6호기 건설 취소 결정을 논평하며 지역 주민·환경단체에 무릎을 꿇는 지방 자치 단체의 장을 비판한다. 이 나라 에너지 정책이 표류할 것을 걱정하고 있다. 그리고 국익·공익을 위한 중앙 정부·지방 정부·지역 주민들의 합

리적인 대화와 협력을 제안하고 있다(2월 2일, 「남비에 휘둘리는 지자체」; 9월 12일, 「영광 원전의 딜레마」).

• 1997년 •

1997년에 16개의 원자력 관련 사설이 나왔는데 그 구성은 경수로 건설 사업에 관한 사설 7개, 대만 핵 폐기물의 북한 반입 거부에 관한 사설 6개, 북핵에 관한 사설 2개, 지진으로부터 원전의 안전을 대비하라는 사설이 1개로 되어 있다.

경수로의 모형에 관한 사설이 1996년의 다수를 이루었다면 건설비 분담에 관한 사설이 1997년대의 다수를 이루고 있다. 미국은 북한에 중유 공급, 연변 핵 연료봉 봉인 비용을 담당하기 때문에 경수로 건설비는 담당할 수 없다는 것, 결국 한국과 일본이 50억 달러, 60억 달러 건설비를 담당해야 하는데 일본은 10%를 담당한다면, 한국이 90%를 담당하게 된다는 계산이 나온다. 일본은 10% 지불에 대한 '반사 이익'이 무엇이나고 묻고 있다. 그렇다면 한국은 무슨 '반사 이익'을 받게 되는가?

미국의 '책임 회피' 대한 비판을 내놓고 있다. 통행·통신·영사 보호 관련 의정서가에 나오고, 부지 및 서비스 의정서가 서명되어도 한국의 마음은 편치 않고, 북은 여의치 않으면 핵 개발로 돌아간다고 협



박하는 상황을 또한 서술하고 있다 (1월 10일, 「경수로, 남북 협력의 실험대」; 4월 9일, 「경수로, 분담금 줄다리기」; 7월 23일, 「경수로 부담금 떠넘기기」; 7월 26일, 「본격화되는 경수로 사업」; 8월 6일, 「남북 협력의 본보기-KEDO」; 8월 18일, 「역사적인 경수로 착공」; 8월 21일, 「경수로 비용 부담의 순리」).

한국처럼 원전에 의지하고 있는 대만이 핵 폐기물을 북한에 수출하려는 계획이 세상에 드러나면서 한국은 거부 반응을 강하게 내보인다. 북한과 대만 전력공사 간의 계약에 따르면 우선 2년 동안 6만 배럴의 쓰레기를 처리하고 필요에 따라 20만 배럴까지 추가할 수 있는 선택권도 대만 측에 있다는 것이다. 황해도 폐광에 넣겠다는 북한의 계획은 우선 불안하다.

사실은 북한을 비난하지 않고 대만을 비난한다. 안전한 시설도 없는 북한에 핵 쓰레기를 버리려는 것은 도덕적으로도, 환경적으로도 불가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1월 17일, 「북한, 핵 쓰레기 반입 안된다」; 1월 26일, 「대만의 생각은 잘못이다」; 2월 1일, 「국제 고립 자초하는 대만」; 2월 23일, 「올브라이트의 한반도 익히기」; 3월 21일, 「핵 쓰레기, 감정 싸움 안돼야」; 9월 11일, 「단념 않는 핵 폐기물 북이전」)

북한 핵은 망명한 북한 공산당 서기 황장엽의 진술에서 다시 나온다. 북한은 이미 핵무기를 보유했으리라는 그의 진술은 미국과 유엔 IAEA가 사실 확인을 하라고 사실을 제안하며 G8 정상회담도 그것을 확인하고 북한의 제네바 협정을 지킬 것을 결의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5월 10일, 「북한의 전쟁 준비」; 6월 24일, 「G8 정상들의 대북 권고」).

한국 원자력발전소의 내진 설계가 진도 7까지 견딜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바라는 사실은 원전의 안전을 GPS를 통해서 단층대를 mm 단위까지 조사하라고 제안한다(7월 4일, 「포항지진, 실수냐 은폐냐」).

• 1998년 •

1998년엔 16개의 원자력 관련 사실이 나왔는데 그 가운데 북한의 핵 개발 의혹에 관한 사실이 7개, 경수로 건설 사업의 비용에 관한 사실이 3개, 인도와 파키스탄의 핵 실험 비판의 사실이 4개, 원전의 안전과 온실 가스 배출 절감과 원전에 관한 사실이 각각 1개이다.

북한의 핵은 영변이 아닌 금창리 지하 핵 시설의 의혹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플루토늄 흔적을 찾아냈다고 주장하며 북한이 의혹을 씻어내야 한다고 주장하나 북한은 내정 간섭이라고 주장한다. 한-미 공동 대

처와 초당적 대북 안보 태세, 식량 지원·경제 지원의 유보를 제안하고 있다. 북한은 서해안 강화도에 간첩선을 밀파하면서 한국의 정성 어린 대북 지원을 외면한다고 주장하고 있다(1월 19일, 「북한 지하 핵 시설 의혹 밝혀야」; 9월 21일, 「북-미 합의 팽개쳐도 괜찮냐」; 11월 13일, 「북한은 핵 의혹 씻어내야」; 11월 21일, 「증거 드러나는 북핵 의혹」; 11월 22일, 「한-미 정상 의 북핵 공조」; 11월 23일, 「북한은 왜 말이 없는가?」; 11월 25일, 「초당안보협력 정례회를」; 12월 9일, 「북-미 <일괄타결>의 유의점」)

경수로 건설 비용의 부담이 계속해서 논의되고 있다. 북한의 도발적 행위, 미사일 발사, 무기 수출이 미국 의회의 대북 중유 공급 예산 삭감으로 나타나면서 미국의 부담을 한국에 넘기는 것을 비판하고 있다. 북한은 경수로 건설 지원을 받으며 핵 의혹을 씻어야 한다고 주장한다(5월 6일, 「경수로 비용 분담 비율 명확해야」; 8월 20일, 「경수로 명분 흐리지 말라」; 9월 24일, 「미-일 정상회담의 명암」).

인도가 핵 실험을 하고, 이어서 파키스탄이 핵 실험을 하면서 세계 비핵화 추세를 거역하는 두 경쟁국들의 핵 경쟁을 경계한다. 세계의 탈 냉전 시대의 흐름을 거역하는 나라들을 비난하고 있다(5월 13일, 「인도의 위험한 핵 놀음」; 5월 30

일, 「세계 핵 질서 깨지려나」; 6월 1일, 「핵 경쟁, 남의 일 아니다」.

울진 원전 1호기의 냉각수 유출 사건을 논평하며 원전의 안전, 투명한 행정을 강조하고 제안한다(11월 12일, 「원전의 안전이 최우선」). 온실 가스 배출을 저감하는 대책으로 원전의 가능성이 논의되고 있다(12월 23일, 「온실가스 대책 실천이 중요」).

• 1999년 •

1999년에 11개의 원자력 관련 사설이 나왔는데 그 가운데 8개가 북한의 핵, 미사일에 관련된 것이고, 2개가 한국과 일본의 원전 사고에 관한 것이고, 1개가 미국 상원이 핵 실험 전면 금지 조약 인준을 거부한 사건에 관한 것이다.

북한의 핵 개발은 1994년 제네바 합의 이후 금창리 지하 시설 의혹으로 이어지다가 중·장거리 미사일 개발로 이어진다. 북·미간 회의를 계속되며 그 회의마다 한국이 담당해야 할 재정적 부담을 우려하는 사설이 나온다. 경수로 건설 사업에서 한국이 대부분의 비용을 대듯 미사일 협상에서도 상당한 재정적 부담을 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북핵에 대해 김대중 정부는 '햇볕 정책', '일괄 타결'로 나오고 있음에 또한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북한은 잠수정 침투, 금강산 개방비의 군사력 강화, 도전적 자세를 보

이고 있기 때문이다. 일괄 타결은 핵과 경제 지원을 함께 묶어서 해결한다는 생각이다.

사설은 남북의 상생, win-win 전략을 도모하며 남북이 주축이 돼, 미국·일본·중국이 함께 참여하는 국제 공조 체제를 지지하고 있다(1월 6일, 「북은 당국 대화에 호응을」; 2월 13일, 「DJ의 냉전 체제 해법」; 2월 18일, 「win-win 구도의 남북 대화를」; 3월 10일, 「당근과 채찍 역할 분담을」; 3월 18일, 「북-미 협상 타결 이후」; 3월 29일, 「평양의 미사일 협상」)

미국 국방 장관을 역임한 Perry 조정관의 북한 방문이 북한 핵, 미사일에 관한 협상을 위한 논평이라는 사설이 2개 들어있다(5월 25일, 「주목되는 페리 방북」; 9월 16일, 「페리 보고서의 허와 실」).

일본 핵연료 가공 회사의 방사능 유출, 월성 원전의 중수 누수를 논평하는 2개의 사설은 모두 원전의 안전 관리와 국제 공조 체제의 안전 관리를 제안하고 있다(10월 2일, 「일방사능 사고가 주는 경고」; 10월 7일, 「원전 안전 이래도 문제 없나」).

미국 상원이 Comprehensive Test Ban Treaty 인준 거부를 비판하며 세계의 비핵산화를 거부하는 행위로 북한 핵을 비판할 명분을 갖고 있는가 묻고 있다. 미국 핵무기의 노후화를 이유로 미래 핵 실험

이 필요하다고 믿는 공화당 상원의원들은 역사의 진전을 거부하는 자들이라고 비판받고 있다(10월 16일, 「우려되는 핵 실험 확산」).

• 2000년 •

2000년에는 모두 3개의 원자력 관련 사설이 나왔는데 남북 정상 회담과 북·미 회담에서의 한반도 비핵화, 한-미 공조체제를 제안하고 있다. 한국은 통일을 원하고, 미국은 평화를 원하고 있다는 서로 다른 한국과 미국의 기대가 인식되고 있다(5월 12일, 「남북 정상 회담에 대한 미국의 이해」; 10월 13일, 「북-미 협상 이후 남는 과제들」; 10월 26일, 「어깨 너머 북-미 평화 협정 안돼」).

• 2001년 •

2001년에는 5개의 원자력 관련 사설이 나왔는데 그 가운데 3개가 부쉬 행정부의 대북 강경이 비판되고 있다. 클린턴 정부의 유화 정책이 끝났고, 부시 정부는 북한의 핵 의혹 청산을 위한 단계별 검증을 들고 나왔고 북한은 경수로 건설 지연에 대한 책임을 들고 나왔다. 북한은 중·장거리 미사일 개발, 발사 유보를 철회하겠다고 선언한다.

사설은 새로운 북·미 관계를 '기(氣) 싸움'으로 간주하며 미국의 감성 외교를 비판한다(5월 18일, 「북-미 기싸움 할 때 아니다」; 5월

28일, 「미국의 대북 감성정책 안된다」; 11월 27일, 「한반도 긴장 고조는 안된다」. 경수로 건설 완료는 2003인데 지지부진한 진도는 북한이 만든 것이라고 미국은 보고 있다. 북한은 남한에게 전력 공급을 하라고 요청하고 김대중 정부는 국민의 동의 없이 그 요청을 받아들여서 논란이 되고 있다(6월 19일, 「대북 전력 지원 논의 투명해야」).

핵 폐기물 처분장 찾는 일에 영광군민 25,000여명이 찬성해 방사성 폐기물 처리 시설 유치 청원서를 영광군청에 제출한 사실을 높이 평가하며 15년간 미해결의 문제가 풀어지는 가능성을 예측하고 있다. 그동안의 문제는 지역 이기주의, NIMBY로 상징되고 있는데 영광군민들이 처음 지역 이기주의 NIMBY를 타파한 것으로 높이 평가받고 있다(6월 13일, 「영광 주민들의 용단」).

• 2002년 •

2002년은 다시 북핵 위기의 해가 되었고 32개의 사실이 나왔다. 미국의 핵 태세 보고서(Nuclear Posture Review)에 관한 비판적 논평이 하나, 일본의 핵 보유 야망에 관한 비판적 논평이 하나로 집계되었다. 모두 34개의 원자력 관련 사실이 나왔다.

미국 국무부 켈리 차관보가 평양을 방문해서 미국의 북한의 우려를

농축 현황을 탐지하고 있다고 언급한 것을 북한이 시인함으로써 그동안 북한이 은밀하게 핵 개발을 시도해왔음을 인정하게 되었다. 10월 이후 거의 매일 사실은 북핵을 논의하고 있다. 햇볕 정책이 배반당했다고 불평하며, 이런 상태에서 경제 지원·협력은 안된다고 주장하며, 초당적·초정파적 대응, 한-미-일 공조, 중국·러시아와의 공조를 제안하며 김대중 정부의 미온적 대응에 대한 불만이나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의 “햇볕 정책 이외 대안이 없다” 정부 정책의 비판을 담고 있다.

북한이 세계 질서로 들어오라고 요구하고 있고, 경제 개방이 제발 남한의 민족주의자들을 봐서라도 이리저리 말라고도 달래며, 남한의 주도적인 역할, 특사라도 보내라고 요청한다(10월 18일, 「뒤통수 맞은 햇볕 정책」; 10월 19일, 「북핵 대미 조율이 급하다」; 12월 31일, 「북핵 공조, 한-미간 틈을 경계한다」; 10월 21일, 「북핵 경험 공존 안된다」; 10월 21일, 「북핵 앞에 정파 없다」; 10월 22일, 「북한의 <비핵화 선언> 위반, 어쩔 것인가」; 10월 23일, 「대통령 정말 몰랐나」; 10월 24일, 「초당적 대북 경고 메시지」; 10월 24일, 「이런 북핵 합의 왜 했나」; 10월 25일, 「<압박을 수반한 대화>가 해법」; 10월 28일, 「공은 북쪽에 넘어갔다」; 11월 1일, 「북한의 생존은 핵 아닌 경제」; 11월

4일, 「북핵 두고 개성공단 착공하나」; 11월 7일, 「<협박외교> 안통한다」; 11월 12일, 「북핵과 중유」; 11월 15일, 「중유 강등 이래선 안된다」; 11월 16일, 「이제는 북한이 답할 차례다」; 11월 18일, 「부시대북 성명에 담긴 뜻」; 11월 20일, 「북한, 미국과 오기 다름해서야」; 12월 4일, 「중국, 러시아 정상의 북핵 해법」; 12월 13일, 「북한 핵 시설 재개 안된다」; 12월 14일, 「한반도에 제 2 핵 위기 오나」; 12월 16일, 「북핵 위기, 정부 적극 나서라」; 12월 17일, 「북핵 개발도 <남조선 보호용>인가」; 12월 18일, 「북핵을 보는 미·일의 시각」; 12월 20일, 「북한, 대북 정책 신뢰 높여야」; 12월 23일, 「북핵 전담 특사 보내자」; 12월 30일, 「한국, 특사부터 북한에 보내자」; 12월 24일, 「북한, 남쪽 대화론자 입지 고려하라」; 12월 25일, 「북핵 모험, 정부 대응 너무 늦다」; 12월 26일, 「북핵, 초정파적 해결책 찾아라」; 12월 27일, 「<주도적> 북핵 해결의 길」).

미국이 북한, 이라크 같은 불량 국가의 미사일 공격에 대응하지 위한 Nuclear Posture Review 보고서에 대해 시대 역행적인 핵 개발이라고 비난하며(3월 1일, 「미국 핵 태세 보고서의 파장」) 일본의 핵 야망을 또한 비난하고 있다(6월 2일, 「일본의 연이은 핵 보유 망언」).

〈다음 호에 계속〉